

2015년 11월25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식 개관했다. 그러나 5개월 전엔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해 만든 민주평화교류원 5·18민주평화기념관은 5·18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1년7개월이 지난 올해 7월 현재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199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무자비한 살상으로 지식을 잃은 어머니들은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외치며 도청 별관에서 300일 넘게 집거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그러던 중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옛 전남도청 원형복원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재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5월 단체를 중심으로 꾸려진 옛 전남도청 복원 범시민대책위는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도 대책위 입장을 전면 수용, 도청을 80년 5월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는 현실상 비현실적인 지적을 피할 길이 없다. 민주평화교류원을 짓기 위해 들어갔던 예산이 증발하고, 건물을 복원하는데 270억원의 돈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의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한 자기 반성 이우선파하는 이유다.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을 둘러싼 갈등의 시작과 과정을 되돌아보고, 해법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편집자주]

“민주정부 응답하라” 복원 문제, 이제는 힘 모을때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해법찾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해결 실마리... “긴장 끈 늦춰선 안돼”
복원 결정 후 남은 과제 많아 “각계 각층과 대화·소통해야”

간극을 좁히지 못했던 옛 전남도청 존치와 복원 갈등의 실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10년 만에 찾아왔다.

예전 중앙정부 등의 반대로 장기간 표류했던 옛 도청복원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8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관해 온 광주시도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80년 5월 모습 원형 복원에 동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 문제를 놓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13일 광주에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이우성 문체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도종환 문체부장관도 대책

위 관계자를 만나 옛 도청 복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와 대책위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도 장관과 공식면담을 갖고 이에 대한 답을 받을 예정이다. 또 정부 차원의 복원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1~2개월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늦어도 8월말까지 소요 예산 규모, 연차별 추진 계획 등을 확정해 정부에 건의 내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원형 복원의 방향 등 큰 그림도 대책위 차원에서 이미 세우진 상태다.

문제는 예산 이미 조성된 건물 내부 콘텐츠를 철거하고 원상대로 복구하는 데만 26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문체부의 의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도 문체부장관의 의지에도 한계에서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문체부

의 경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문화전당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런데 도청 복원 문제를 문의하면 여전히 ‘문화전당과 협의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2년 동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는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기구나 부서가 없는 셈이다.

이에 추진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주평화교류원은 문화전당이 맡고 있다”며 “시와 대책위라도 장관과 만나 최근 긍정적인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단이 내려진 뒤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답답한 사정은 광주시도 마찬가지. 시의 경우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그 이후의 문제를 맡아 추진할 수 있는 전담부서나 인력이 없다. 현재 옛 도청문제는 자치행정실 직원들이 본래 업무와 함께 맡고 있다.

정춘식 5·18 유족회장은 최근 시민공청회에서 “문 대통령이 ‘광주시와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반



드시 복원하겠다는 말은 아니다”며 긴장을 끈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 등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역할이 절대적인 만큼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원형 복원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먼저 ‘민주평화교류원을 5·18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문화전당은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시와 대책위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미지수다.

문화전당의 핵심 목적인 민주·평화·교류 기능을 잃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나머지 4개 원의 시설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민주평화교류원의 기능을 수행할 다른 공간을 찾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원형 복원의 범위와 내용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광주시와 대책위는 ‘80년 5월 모습 그대로의 원형 복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37년의 세월과 문화전당 조성 과정을 거치며 훼손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광주시가 13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옛 전남도청 등에서 보존, 관리해 온 기초자료들을 수집하는데 집중할 예정이지만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고증 자료가 충분치 않다.

더욱이 복원된 건물 내부 콘텐츠를 어떻게 채울지 5·18기념관의 운영은 어떻게 해 나갈지를 놓고 대책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문제는 문화전당과 갈등을 겪었던 원형 복원 문제와 달리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대책위와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화와 소통,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책위 김영정 집행위원장은 “지역 사회에서 정부의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문체부가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복

원사업의 가닥을 잡는다면 이후 정부 차원의 복원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또 앞으로 남은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대화와 협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간채 5·18기록관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대화와 소통을 해야 한다. 시민을 포함해 각계 각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원형 보존에 대한 합의를 만들었을 때 현실적인 정당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김희송 5·18연구소 연구교수는 “결국 옛 도청 원형 복원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야 한다. 시민, 전문가, 청년, 5월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끊임 없이 토론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의제와 여론을 모아야 한다”며 “집단지성의 힘을 토대로 원형 복원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